

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성과

2006. 2. 21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차 례

- I** 비전과 전략
- II** 추진현황과 성과
- III** 미래상



I 비전과 전략



1. 정책추진 배경

요소 투입형 성장

수도권 일극중심 성장

물질□개발주의적 성장

혁신주도형□창조형 발전

다핵경제권 조성

삶의 질 향상

세계화 · 정보화 · 지방화

소득증가 · 건강 · 행복 추구



2.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

다핵형 □ 창조형 선진국가 건설

모든 지역이 혁신역량과 삶의 질 구비

균형발전정책의 개념확대 및 체계화

혁신정책

균형정책

산업정책

공간정책



삶의 질 정책

- 살고 싶은 도시와 농촌
- 수도권외의 질적 발전
- 도농상생형 국토공간 조성



Ⅱ

추진현황과 성과

지역혁신체계 구축

1. 혁신정책(2)

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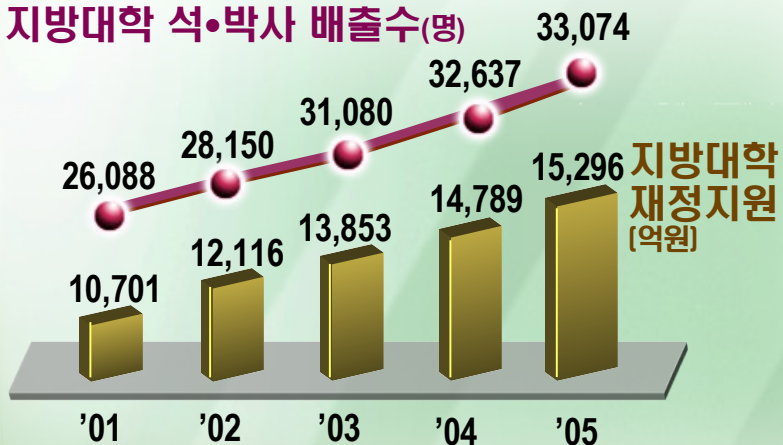
-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

'04년 113개 대학, 112개 사업단
총 2,200억원 지원

'06년 109개 대학, 122개 사업단
총 2,600억원 지원

※교수 6천여명, 학생 19만여명 참여

지방대학 석·박사 배출수(명)



지방 R&D투자 확대

- 지방의 기술혁신역량 강화
- 정부R&D예산의 지방투자 비율 확대



특허출원(건수)



2. 균형정책

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기회 부여

신활력사업

- 1·2·3차 산업의 융복합화
- 도농교류 활성화 : 5도2촌, 5촌2도
 - 체험마을, 은퇴자마을 조성
 - 장소마케팅 활성화
- 70개 시□군에 9천억원 투자 (3년간)
 - 농촌주민의 소득기반 다양화
 - 도시민의 건강과 활력 증진

지역특화발전특구

-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의 특성화 발전
- 지역투자촉진 : 41개 지역 1조 4천억원

향토자원진흥
특구 18개소



의료□건강
특구 등 10개소



관광□레저
특구 7개소



교육관련
특구 6개소



3. 산업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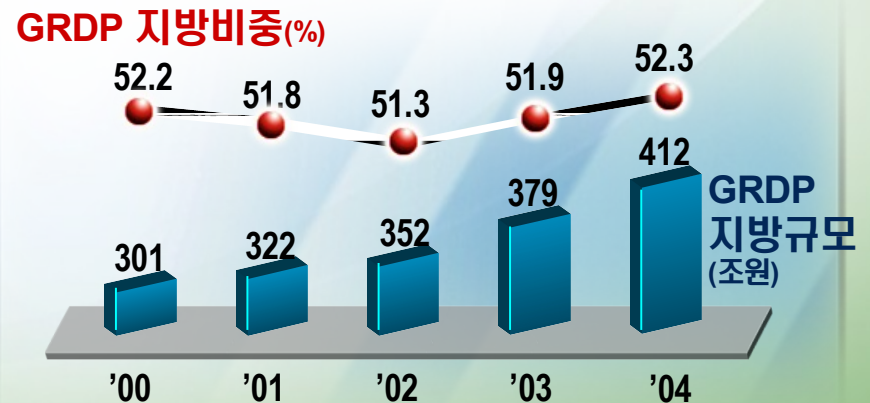
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

지역전략산업 육성

- 시·도별로 4개 전략산업 선정
 - IT, BT, 신소재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
 -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
- 지역 산업혁신기반 강화
 - TP, RIC, CRC 등 기능활성화 및 연계 촉진

혁신클러스터 육성

- 대덕연구개발특구
 - 기술의 상업화·사업화에 역점
-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
 - 7개 시범단지 운영
 - 경영컨설팅, 공동기술 개발, 맞춤형 교육, 장비지원 등
 - 48개 미니클러스터 가동



4. 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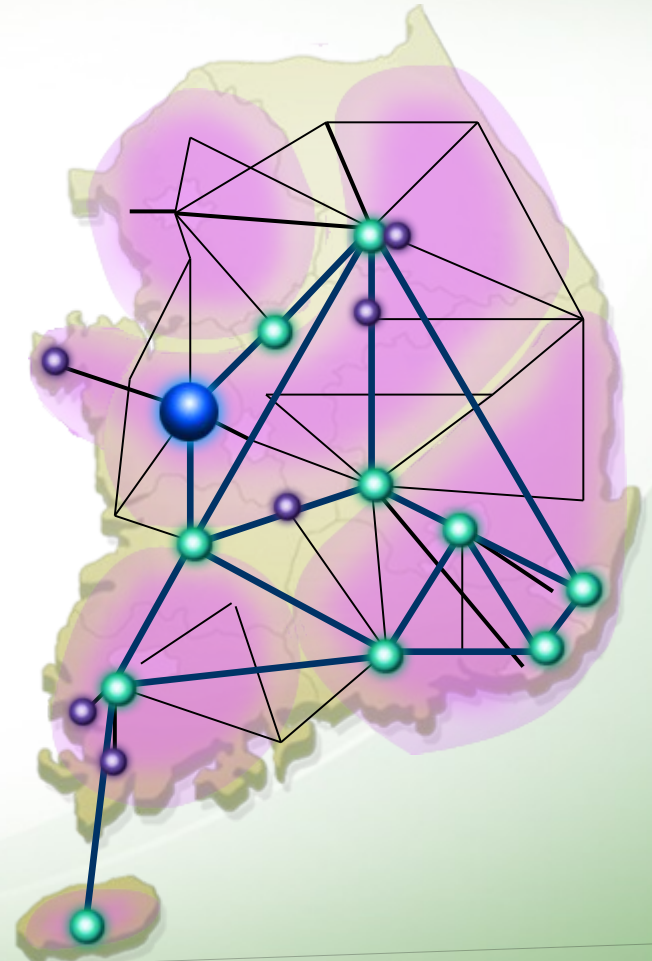
행정중심복합도시

국분산 국토구조로 전환하는 초석
리나라 첨단기술과 문화의 전시장

혁신도시(10개소)

- 공공기관과 산□학□연의□협력으로 지역혁신 선도
- 사이언스파크, 첨단산업도시, 전원도시의 복합도시로 발전

- 관광레저, 산업교역 등 분야의 투자촉진
- 지역특성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(17조원 신규투자)



4. 공간정책[2] : 혁신도시 건설의 의의

공공기관 이전 개요

- 전국 10개 시·도에 혁신도시 건설
- 이전대상
 - 공공기관 175개
 - 직원수 3만 2천명
-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배치
 - 12개 산업특화기능군
 - 9개 유관기능군



혁신도시 건설 효과

-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
 - 공공기관과 지역대학, 기업 등과 협력
 - 지방의 우수인력 확보
- 산업클러스터 형성 촉진
 - 민간기업 지방이전 및 지역내 창업촉진
 -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
-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
 - 일자리 창출 13만3천개
 - 생산유발 효과 9조원(연간)
 - 부가가치유발 효과 4조원(연간)

5. 삶의 질 향상 정책(1) :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

삶의 질이 경제발전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지식·창조형시대를 맞아,
환경, 경관, 문화 등을 고루 갖춘 지역공동체 형성

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



5. 삶의 질 향상 정책[2] : 수도권외의 질적 발전

인구안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
세계적 대도시권으로 도약

인구 안정화

- 계획적 관리체제의 도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관리
- 2020년 수도권 인구를 47.5% 수준으로 유지

<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중 변화 >



삶의 질 향상

- 공원, 숲 등 녹지를 최대한 확보
- 환경오염 저감
- 경관·미관 개선
- 역사·문화의 복원 및 확충



미래상





2. 균형발전사회의 대외비전



정부와 지역이 힘을 합쳐
동북아중심국가로 도약하고 **세계화에 능동적**으로 대응